

시민안전실

I. 일 반 현 황

II.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

III. 2017 업무여건과 중점방향

IV.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

I. 일 반 현 황

① 주요기능

- 지역안전관리계획 및 시기별 안전대책 수립, 재난관리기금 운영
-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안전체험·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
- 취약시설물 안전점검·관리로 재난안전사고 예방
-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, 민·관 협력 등 총괄적인 재난관리
-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재난 예·경보시설 운영으로 신속한 대응
- 풍수해피해 저감 등 자연재난 예방·대응으로 피해 예방
- 국가비상대비 통합방위태세 구축 및 동원자원 관리
- 민방위대 운영·시설관리,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등 주민보호
- 민생유해사범 단속 특별사법경찰 운영, 범죄 예방활동 지원

② 조직 및 인력 - 4과 12담당 65명(정원)



③ 2017년 세출예산현황 - 25,509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안전정책과	재난관리과	비상대비과	민생사법경찰과
계	25,509	22,300	1,763	1,257	189
일반회계	17,080	13,934	1,700	1,257	189
특별회계(소방안전)	66	3	63	-	-
재난관리기금	8,363	8,363	-	-	-

* 일반회계 : 재난관리기금 전출금(내부거래) 13,594백만원 포함 / 순수 일반회계 3,486백만원

II.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

-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민생안정 및 범죄예방 등 안전도시 기반 강화
- 지진·원자력 대책 추진, 재난취약시설 총체적 점검 등 시민안전 확보

① 예방위주 안전관리 및 시민 안전문화 확산

- 지역안전관리계획(95개분야), 안전도시종합계획(56개과제), 안심마을 조성(5개)
- 취약시설 관리(4,677개소), 시기별 점검(5,799개소), 국가안전대진단(10,010개소)
- 안전체험한마당(2일간), 찾아가는 안전교실(78개소), 안전점검의 날 운영(12회)

② 선제적 재난관리 및 재난대응안전망 확충

- 안전한국훈련(5일간), 상시훈련(8회), 전문교육(4회), 매뉴얼 정비(28종)
- 지진 대응 종합대책 수립(10개과제), AI 재대본 운영, 재난방송 협약
- 재난 예·경보시설 확충(55개소), 재난안전통합영상지휘체계 구축

③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원자력 안전대책 강화

- 실전적 을지연습, 통합방위협의회 운영(4회), 총무계획 수립(21개 분야)
- 민방위 교육·훈련(6회), 노후 경보통제시스템 교체, 경보사각지역 해소(1개소)
- 환경방사능 측정(26개지점), 방사선 관제(6개소), 방사능 방재훈련(2회)
- 중·저준위 방폐물 이송(1,200드럼), 원자력 안전대책 수립(단기·장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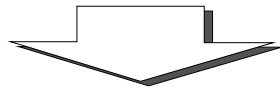
④ 민생유해사범 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

- 식품·환경·위생 등 위반업소 단속·조치(송치 94, 고발 1, 행정처분 78건)
- 방범용 CCTV 확대 설치(369대),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지원

Ⅲ. 2017 업무여건과 중점방향

업무여건

- (사회환경) 시설 노후화와 인구의 고령화 등 위험사회 가속
 - － 시설물 위험요인과 안전 취약계층 증가, 시민 안전욕구 증대
- (자연환경)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
 - － 대규모 지진·풍수해·폭염·한파 등 다양한 재난 발생
- (지역환경)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과 원자력 안전 우려 고조
 - － 유사시 대비 통합방위 및 방사능 안전체계 강화 필요
- (생활환경) 교통·범죄·먹거리 등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취약
 - － 각종 취약환경 및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시민불안 가중



중점방향

- 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대책 마련
 - － 시기별·분야별 안전대책 추진, 총체적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
- 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통합관제형 재난안전망 운영
 - － 재난관리 역량 강화, 지진·폭염 등에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보호
-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민방위·원자력 안전 강화
 - － 통합방위 및 경보체계 보완, 민·관·정 협력 및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
-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민생안정 도모
 - － 시민체험교육 강화와 안전 신고 활성화, 민생유해사범 단속 강화

Ⅳ.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

1.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기반 조성
2.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확산
3. 선제적 재해예방 대응태세 확립
4. 재난대응역량 및 민·관 협력 확대
5. 비상대비 및 원자력 안전 강화
6. 범죄예방 및 특사경 수사활동 전개

1.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기반 조성

- 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감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
 - 빈틈없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통해 시민안전 확보
-

①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 추진

- 재난안전사고 예방·대응을 위한 「지역안전관리계획」 수립·시행
 - － 자연·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(83개),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(13개),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재난대응체계(33개)로 구성
- 시민안전을 위한 실천적인 「안전도시종합계획」 수립·추진
 - － 시기·계절별, 장소·기능별, 안전의식 등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
 - － 분야별 유관부서·기관 합동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(연 2회)
- 지역 안전개선컨설팅 연구결과 활용, 중·장기 안전정책에 반영

②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

- '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' 대상 시설물 / 1,900개소
 - － (1종) 500m이상 교량, 21층이상 또는 50,000㎡이상 건축물 등(160개소)
 - － (2종) 100~500m미만 교량, 16층이상 또는 30,000㎡이상 건축물 등(1,740개소)
- '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'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/ 2,853개소
 - － (시설물) 20m이상 교량(10년 이상), 육교(10년 이상), 유원시설 등(171개소)
 - － (건축물) 15년이상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(2,682개소)
- *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(2회), 안전등급 평가·조정 등 지속 관리

③ 재난안전 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

- 국가안전대진단(6대분야, 2~3월) / 해빙기 등 시설물 총체적 합동진단
- 다중이용시설(백화점, 터미널 등, 2회), 초고층·지하연계 건축물(6개소, 2회)
- 동물 사육시설 점검(4개소, 2회), 여름철 물놀이관리지역 안전관리(9개소)

2.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확산

-
-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개선 노력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
 - 안전교육 강화와 실천형 안전문화 정착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
-

① 민·관 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

- 시민과 함께하는 「안전점검의 날」 운영 / 매월 4일
 - － 시기별 주제 선정, 재난대응 및 안전수칙 등 홍보, 안전점검활동 병행
-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및 선도사업 추진
 - －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 운영 활성화(분과별 실천과제 발굴·추진)
 - －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 지원(재난구호 종합훈련, 안전 캠페인 등)
-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
 - － 마을 단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'안심마을 만들기'(3개 내외, 75백만원)
 - － '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' 지속 추진(국민안전처 공모사업 연계)

②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·체험위주 안전교육

- 'Safe 대전 안전체험한마당' 개최 / 9월중
 - － 재난·소방·교통·생활안전 등 4개 분야 체험프로그램 운영
- 현장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
 - － 어린이집, 경로당,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
-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쇼 개최(안전상식 및 재난대응요령 등 풀이)

③ 점검하고 신고하는 실천형 안전문화 정착

- 3대 핵심수단(확인·점검, 신고·단속, 교육·홍보)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
 - － 주기적 점검(매월 4일), 안전신문고 활성화, 맞춤형 교육 강화
 - － 안문협 분과별 참여 홍보, 안전문화홍보관 설치·운영(엑스포남문광장)
-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/ 언론매체, 현장부스 운영 등

3. 선제적 재해예방 대응태세 확립

- 재난안전망 고도화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
 - 선제적 재난대비와 예방대책 추진으로 인명·재산 피해 최소화
-

① 신속한 재난상황관리와 재난안전망 확충

- 누수 없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
 - － 실시간 각종 재난정보 수집·분석·전파,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
- 통합관제형 재난안전상황관리체계 구축·운영
 - － 재난감시 CCTV 등을 유관기관과 연계·활용, 재난안전통합영상지휘체계 운영
- 재난 예·경보시설 확충(65개소 / 재난감시CCTV, 재난방송설비, 수위계 등)

② 사전 예방중심의 재난대응태세 구축

- 계절별 대책기간 설정 운영, 재해예방 총력 대응
 - － 여름철(5.15 ~ 10.15), 겨울철(11.15 ~ 익년 3.15) / 사전 대비기간 별도 운영
- 재난 유형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
 - － 대응절차, 상황판단회의, 업무별 협력계획,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
- 재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'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' 운영
 - － 대형 개발사업 대상 재해영향성 심의 / 위원회 구성·운영(28명)

③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

- 지진 대비 및 대응·복구체계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
 - － 공공건축물 내진보강(112개소), 지진대피소 일제정비,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등
-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보강 및 예찰활동 강화
 - － 급경사지, 대형 건설현장, 방재시설물 등 정기·수시점검, 위험요인 조치
- 자연재해 피해 시 실질적 보상을 위한 '풍수해보험' 가입 지원
 - － 주택, 공동주택, 온실 등 대상 / 보험료의 55~86% 지원

4. 재난대응역량 및 민·관 협력 확대

- 지속적인 현장훈련과 행동매뉴얼 정비·숙지로 재난 대응능력 제고
 -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와 민·관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 수습·복구
-

① 실전적인 현장 재난 대응능력 제고

-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/ 대응체계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
 - － (안전한국훈련) 5월중(5일간), 시·구 및 유관기관·단체 합동 참여(90여개)
 - － (상시·수시훈련) 재난유형 선정,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현장훈련 실시
 - － (상황전파훈련) 불시 재난상황 전파 및 대응상태 점검
- 재난유형별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정비로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
 - － 28종 매뉴얼 보완, 포켓용 제작, 민간다중이용시설 훈련 지도·점검

② 재난관리 역량강화 기반 구축

- 재난관리 자원의 체계적인 비축·관리로 신속한 재난현장 수습 지원
 - － 자재·장비·인력 등 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, 자원이동 훈련 실시
- 재난관리 평가·환류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제고 및 책임성 강화
 - － 개인·네트워크 역량 등 4개분야 43항목, 시·구 대상평가 후 인센티브 제공
-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/ 시·구 및 공사·공단(직원 300여명)
 - － 재난안전 교육(2회), 자체 전문교육,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등 운영

③ 재난안전 민·관 협력체계 강화

-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(제2기) / 14개 기관·단체 참여
 - － 유관 기관·단체가 안전관리 주체로 참여, 역할 부여 및 대응 협력
- 재난예방·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/ 자율방재단, 재난피해심리지원센터
 - － 자율방재단 워크숍·간담회·전문교육,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및 상담
- 재난복구 유관기관 간 전문인력·장비 지원체제 구축 / 건설기계협회 등

5. 비상대비 및 원자력 안전 강화

- 통합방위태세 유지와 민방위 및 경보운영으로 철저한 비상사태 대비
 -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와 방사능 방재역량 강화로 시민불안 해소
-

① 확고한 통합방위 및 전시대비 태세 유지

- 각종 방위요소의 통합 지휘·통제가 가능한 통합방위C4I시스템 구축
 - － 영상회의시스템 추가(2개소), 충무시설 시설개선 / 220백만원
- 민·관·군·경 협력체제 구축과 전시 대비훈련 추진
 - － 통합방위협의회(4회),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, 예비군육성 지원, 안보체협
 - － 충무·화랑훈련(5~6월), 을지연습(8월), 동원자원·인력 조사, 충무계획 수립 등

② 주민보호를 위한 원자력 안전대책 강화

- 다양한 On-off line 소통채널을 통한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
 - － 원자력안전정보센터, 원자력안전협의회, 홈페이지, 전광판 등, MOU기관 협력
 - －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측정(32개지점), 방사선 관제시스템 운영(7개소)
- 주민보호체계 마련 및 방사능 방재역량 강화
 - － 방사능방재계획 수립, 행동매뉴얼 정비, 방재장비 확보(5종), 주민보호훈련(10월)
- 방폐물 이송과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
 - － 중·저준위 방폐물 이송(1,400드럼), 파이로프로세싱 제3자 안전검증
 - －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 개정 등 안전망 구축 / 민·관·정 협력

③ 민방위대 운영 및 경보전달태세 확립

- 민방위대 편성·운영, 1~4년차 집합교육, 5년차 사이버교육, 민방위 훈련(7회)
- 민방위 대피시설(927개소) 및 비상급수시설(200개소) 점검·관리 강화
- 대형재난 및 비상대비 24시간 경보전달 체계 운영
 - － 경보통제소 운영, 산불·화재·물놀이 등 안전 홍보방송, 민방위 훈련경보 등
 - － 경보단말 신설(1개소) 및 교체(6개소), 위성수신기 교체(26개소) / 414백만원

6. 범죄예방 및 특사경 수사활동 전개

- 유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로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전 도모
 -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보호활동 지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-

① 시민생활 유해사범 근절 수사활동 강화

- 수사분야 : 민생관련 7개 지명분야
 - － 식품, 공중위생, 의약품, 환경, 원산지표시, 축산, 청소년보호
- 수사방법 : 분야별 선제적 수사활동
 - － 시기·계절 및 사회적 이슈에 따른 테마별 선제적 기획수사
 - － 7개 지명분야를 3개영역으로 분류, 3개팀 각 분야별 단속수사 활동
- 주요내용 : 시민생활 유해사범 집중 적발
 - － 불법 의료행위 및 환경오염 발생업체 등 시민건강 침해사범 단속
 - － 4대 사회악으로 분류되는 부정·불량식품 제조, 유통, 판매업체 적발

② 유관기관 수사협력 및 수사역량 제고

- 대전지방검찰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사 협력체계 강화
 - － 검찰청(불량식품 합동단속, 간담회), 농관원(원산지 합동단속, 회의 개최 등)
- 특별사범경찰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지원
 - － 전문기관(법무연수원, 대전지검, 식약청) 교육, 타 기관 견학, 특사경 표창

③ 범죄예방 기반조성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

-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지원
 - － 범죄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 등 선정, 방범용CCTV 설치(200여대)
-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
 - －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(방범초소 개선, 방범장비 및 근무복 지원 등)
-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
 - － 우수 자율방범대(5개대), 모범 자율방범대원(10명)